

대선 후보들, 오늘 첫 일정 나선다

이재명 ‘광화문’ · 김문수 ‘부산’ · 이준석 ‘전남 여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화문을 필두로 수도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각각 첫 일정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경기 성남시 판교동과 화성시 동탄, 대전광역시를 순차 방문하는 공식 선거 운동에 나선다. 선거운동 기간 유세 콘셉트는 ‘경청’과 ‘통합’으로 설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이 후보 일정을 소개했다. 민주당이 강조

해온 ‘빛의 혁명’의 상징성과 맞물려 광화문 광장부터 경기도, 대전 등 남쪽으로 이동하는 유세 동선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이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를 시작으로 12시에 ‘K혁신’ 관교에서 혁신과 관련된 브라운 백 미팅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후 오후 3시에 ‘K반도체’ 유세를 동탄에서 하고 오후 4시 30분에는 ‘K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대전에서 유세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K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남쪽으로 쪽 진행하는 유세 콘셉트를 갖고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대전 등 남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내일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에서 첫 일정을 소화할 뜻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논란으로 분열된 지지층을 먼저 재결집한 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뉴시스에 “김 후보는 내일 부산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당일인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당 지도부에 향해 ‘광복의 빅텐트’를 언급하는 등 당 내용 수습에 착수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큰절을 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더 넓게 품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반국가 반체제를 세력 막기 위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내자. 시작은 우리당이 하나로 완전히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오전 0시 본선거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각오와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학식머자 이준석’ 행사를 한 뒤 오후 7시부터 광화문과 청계광장에서 첫 집중유세를 진행한다. 그는 오후 10시부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지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회회관에서 열린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윤여준·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공식 출범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비명·친명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박용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화합위는 앞으로 이 후보의 사회 통합·노동 정책을 발굴·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주당 화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정책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여준·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상 축사에서 “한겨울 추위로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합성과 열정으로 광장과 함께 해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들”이라며 “이제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해보자”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앞장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어왔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IMF를 극복했고 IT 강국과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

화의 새 지평을 열었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난도 잘 이겨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부터 여러 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고 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은 “제 이름은 박용진”이라며 “그러나 언론에서 혹은 사람들은 박용진이라고 쓰고 비명(비이재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얘기는 이 후보와 결이 좀 다른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명·친명(친이재명)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를 두고 비판하고 우려하고 걱정하지만 저는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오늘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 일을 해낼 슬로 있는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르게 말씀드리다”라며 “(국민의힘은) 낮이면 싸우고 밤은 분열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밤낮으로 연대하고 단결하고 확장하고 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

신한다”라고 했다. 김경수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규모로 보면 중앙선대위 출범식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박 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가 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8년 처음 총선에 출마했을 때 슬로건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려면 민주주의의 파괴자를 견연히 심판하고 물리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파괴자를 그대로 두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그런 첫 단추를 꿰는 선거로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후 국민화합위는 △내란종식과 국민 화합을 위해 진짜 대한민국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 △모든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할 것 △극단적인 정치 언어를 배격하고 통합의 언어로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국민화합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국민 연금에서 소외되지 않는 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의제로 한 선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뉴시스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 자격 복원

당원 투표로 ‘한덕수 교체안’ 부결…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이 복원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0일 새벽 3시경 김 후보를 낮은 지지율과 후보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이유로 한덕수 후보로 대선후보를 교체하려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이를 당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정면으로 저지하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정권교체의 승부수를 위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절차’였다. 이미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비대위 단독 결정으로 교체하려 한 데 대한 반발이 거셌다. “민주적 정당 운영 원칙을 무시드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고, 일부 당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혼란 속에 국민의힘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의 책임당원을 상대로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긴급한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다수 당원은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추진한 대선후보 교체안은 부결됐고, 김 후보의 자격은 즉시 복원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당원들의 뜻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극적인 반전을 이룬 김문수 후보는 곧바로 선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동영 의원, AI인재양성 데이터센터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두 건의 법안을 9일 대안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발의한 ‘AI기본법’에 이은 후속 입법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AI인재육성특별법)’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데이터센터진흥법)’이다. AI인재육성특별법은 AI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AI데이터센터진흥법은 AI 산업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두 법안은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AI인재육성특별법’은 총 20명, ‘AI데이터센터진흥법’은 총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AI 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주차난 해소기대

정동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전주시 등 비수도권 대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은 최근, 전주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규정은 서울보다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전주시에도 낮은 수준의 주차기준을 적용해 생활 불편과 제도적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0.56대로, 서울(0.34대)보다 훨씬 높다.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에는 광역시와 같은 주차 기준을 적용하고, 도시 계획 승인 시 전가차 충전시설, 소방차 진입 공간 등 도시 인프라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전주시민의 교통 현실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주차 기준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법적 정비”라며, “주차권과 교통권을 함께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의 주차기준이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구도 · 광고문의 063-288-9700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 봉쇄해야”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정치적 중립의무”
후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선거운동 자유 침해”

조국혁신당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장과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 기일을 지정한 점을 위헌·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검란으로 3년, 그리고 지난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던 국민은 이제 법란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경고한다. 재판으로 정치하지 말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했다. 한편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의결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뉴시스

“농업, 기후위기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농축산식품분야 공약 발표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 전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에 강한 기후저항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 · 노동자 ‘천원의 아침 밥’ △미취업 청년 ‘막거리 바우처’ 제공 사업 추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친환경 · 유기농업을 확대하

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유전자 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제추진 의사로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밖에 △공약작불금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 · 재해 국가 책임제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림수산물품 분야 정부 예산 확대 △‘햇빛연금’ 도입 등을 공약했다. 나아가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추진하겠다”며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이정린 도의원,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의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며 법안을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의회 인사청문위, 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적합’

익산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 후보자인 이지영 씨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 ·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10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행됐으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비공개) △

직무수행능력 검증(공개) △경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현 위원장은 “후보자는 40여 년간 공직자로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했으며 대통령 표창까지 포상 내역이 우수하다”며 “익산시 부시장과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기에 공단 업무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합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익산시장에게 전달되면 5월 중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익산=이준수 기자